

난민 혐오 반대한다

난민을 환영한다



사진 이현주

우익의
난민 비방을
반박한다

11, 12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주제 해설

6~7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 하락
좌측의 대안이 중요하다

3면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
가능한가?

4면

리먼브러더스 파산 10년
체제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때

5면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8면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자를 오히려
키운 정부

10면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김지윤

대북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넘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보안법 위반 구속자다. 8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호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 군사기밀과 돈을 건넸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원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가 남북 화해를 말하는 와중에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여전한 것이다.

김호 씨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제작 업체 대표로,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두고 북한 개발자들과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김호 씨는 자필 편지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호 씨는 영장에 제시된 “반국가단체 구성원” 두 명을 2007년부터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접촉신청을 하고서 만났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했는데, 김호 씨는 자신의 사업이 북한과의 협력 속에 이뤄진 것임을 알리며 이미 7월에 기업은행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오히려 김호 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을 정보원으로 삼으려 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북한 정보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북한 개발자 탈북 공작을 제안했다고 한다. 범민련, 진보당을 문제 삼으며 “옛 인맥에 대한 접근을 요구”해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도 했다.

심지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호 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 인멸 증거라고 기재했다. 나중에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담당 수사팀을 징계하지도 않고 단순 교체해 수사를 계속했다. 김호 씨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무고·날조 등의 혐의로 해당 수사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뿐 아니라 경찰은 김호 씨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면회 신청을 불허했다.(국가인권위에 사안을



문재인도 국가보안법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접수하고서야 면회가 이뤄졌다.) 경찰 청장이 나서서 “인권 경찰”이라 떠든 것은 위선에 불과했던 것이다.

검찰은 김호 씨가 20년 전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서총련)에서 투쟁국장으로 활동한 점을 들어 진보·좌파 진영과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진보·좌파를 속죄양 삼아 정부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떠넘기고 우파를 달래려는 것이다.

사실 지배자들의 논리대로라면,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만나 회합·통신을 한 문재인에게도 보안법 위반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중잣대는 국가보안법이 극도로 자의적인 체제 단속법임을 보여 준다.

지배자들의 무기

지배자들은 보안법을 이용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억누른다. 보안법은(북한에 대한 입장과는 무관하게) 사상, 결사 일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노동계급이 자체의 사상을 가지고 조직을

결성해 정치를 표현하는 것을 억누르려는 것이다. 반국가단체, 이적행위 등의 명목으로 공격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겁주고 대중과 좌파를 분리시키는 효과도 낸다.

그 자신이 보안법의 피해자였던 김대중이나 인권 변호사 출신 노무현도 정권을 잡고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지자들의 이반을 막으려 보안법 개정 카드를 꺼내 놓고는, 얼마 못가 우파들의 압력에 타협하는 식으로 끝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9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열흘에 한 명 꼴이다. 기소된 수는 훨씬 많아서 412명에 이른다(대검찰청). 노무현은 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더니 칼날을 버려 노동운동과 좌파들에게 휘둘렀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첫 해, 송두율 교수를 대대적으로 마녀사냥했다. 두 해 뒤, 검찰은 강정구 교수가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을 문제 삼아 기소했다.

이듬해에는 민주노동당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몰아(‘일심회’ 사건) 탄압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발표했지만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한총련 활동가들은 거듭 탄압의 대상이 됐다. 심지어 2003년 5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두고도 “국가보안법이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게시 금지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안법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시 모든 구속 사례에 보안법 7조 ‘찬양·고무’가 적용됐다. 7조는 핵심적 사상 통제 조항으로 문재인조차 그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구체적 행위가 없더라도 선전과 선동만으로도 죄를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견해의 유죄 여부는 오로지 국가기관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자의적이다. 지배자들은 이 점을 활용해 정부와 체제에 비판적인 사상들을 공격해 왔

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과 단체들뿐 아니라 한미FTA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과 운동도 탄압 대상이 됐다.

포용국가?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보안법 폐지를 기본에선 동의한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좀 풀리고 긴장이 해소돼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얘기라고 본다”며 보안법 당장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댔다. 벌써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보안법 폐지는커녕 개정조차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도 2011년 자신의 저서에서 “진리와 양심을 재단하는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 야만”이라며 비판했지만 청와대 입성 후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정원과 기무사를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간판만 바꿨을 뿐, 두 기관의 핵심 문제인 정치 사찰과 수사 권한의 근거는 그대로 남겨뒀다. 보안 경찰이 보안법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우경화가 본격화되고 이에 맞선 저항이 커지면 지배자들은 더 빈번히 보안법을 사용하려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김호 씨 구속은 남북관계 발전이 자동으로 민주적 권리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민주적 권리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서만 확대·쟁취할 수 있다.

최근 문재인은 “포용국가”를 강조했지만, 정작 사상의 자유조차 포용하지 않고 있다.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과 활동가들은 평화적 수단(토론)으로 정치 활동을 했을 뿐인데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김호 씨를 포함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김재현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가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비 폭등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제주영리병원을 불허하면 됐을 일인데 공약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지금까지 끌여온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좌절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영리병원 시도였던 중국 의료기업의 ‘싼얼병원’은 대표의 사기성 투자와 구속 논란으로 망신만 산 채 좌절됐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다음해 50병상 규모의 피부·성형 병원이던 싼얼병원



물꼬뜨기 제주 영리병원은 의료 상품화 확대·환자 안전 위협을 부를 것이다

과 판박이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줬다. 녹지국제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자기업으로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하다. 국내 성형

자본이 중국을 우회해 첫 국내 영리병원을 운영하려 한다는 강력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제주도정은 허가를 강행했다.

이 의혹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인지 제주도와 복지부가 싼얼병원 때와는 달리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 조사위원회’(이하 공론위)가 가동돼 이제 두 차례 회의만 남겨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공론위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전에 비공개로 합의한 적도 없는데도 그랬다. 한마디로 ‘깜깜이 공론위’라 할만하다. 아마도 조사 결과가 영리병원 반대 쪽으로 기울어서일 듯하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

달 16~1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6퍼센트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반대한다고 답한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1차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해 구성한 도민참여단 200명의 오리엔테이션이 9월 9일에 열렸는데, 여기서도 반대 쪽 목소리가 우세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설립 문제를 소수가 외부와 차단된 채 논의하는 공론위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한 상황을 이용해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설립 저지 운동을 벌여야 한다. 9월 16일과 10월 3일 도민참여단 토론을 하고 나면 제주영리병원 설립 여부가 최종 결론난다. 제주 영리병원 저지 운동에 지지를 보내자.

문재인 지지율 하락, 왼쪽의 대안이 중요하다

김문성

9월 첫째주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문재인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퍼센트대 초반으로 취임 후 최하를 기록했다. 한 조사에서는 아예 50퍼센트 밑으로 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 80퍼센트까지 갔던 지지율이 넉 달 만에 폭락한 것이다. 게다가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함께 늘었다. 지지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반감도 커진 것이다.

청와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듯하다. 청와대 대변인은 9월 7일 이렇게 말했다.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

사실 청와대는 8월부터 심각하게 생각해 왔다. 4월에 약속했던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자더니 결국 9월 4일 김정은에게 특사를 보내어 회담을 추석 직전으로 앞당겼다. 이른바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일 것이다. 물론 북미간 중재도 고려했을 것이다. 때마침 트럼프도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9월 6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대선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내세웠던 주장이다. 당시 대선 캠프에 포용국가위원회를 만들었고, (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보다 먼저) 노무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성경룡 교수가 이를 이끌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지지층 이탈의 연계 조짐이 보이자,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민주당의 새 당대표 이해찬,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까지 모두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국토부는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원인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는 결정적으로 대중의 불만이 작용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사실 문재인은 노동 정책에서부터 급속히 우선했다. 특히 설비투자가 줄고 고용지표가 악화했다.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올해 3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빚어진 일자리 위기에 정부 개입을 거부한 것은 문재인 본인이었다. 하지만 5월 이후 문재인은 ‘앗 뜨거’ 하는 태도로 삼성과 엘지 등에 투자 확대를 요청했고, 줬다 뺐는 최저임금 삭감 개악을 강행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서도 인기 있는 구호였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은 부족했어도 촛불 염원의 일부 실현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적용된 지 겨우 다섯 달 만에 말짱 도루묵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뒤로도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추진하다가 당시 야당 지지층이 강하게 반대한 의료 영리화 정책을 ‘혁신 성장’의 이름으로 추진하려 한다. 국



참고 기다릴 때가 아니다 문재인이 빠른 우경화에 맞서 대거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쟁으로 기반적 노동 정책을 폭로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민연금 개악 추진도 반발을 사고 있다. ‘포용 국가’의 이름으로 평생 복지 운운한 것은 국민연금 개악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노조 인정 등 간단한 노동적폐 청산조차 거부했다. 삼성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단죄 등도 속 시원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개각에서도 기업과 노동정책을 다루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보수적인 친기업 관료들을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들은 진선미, 유은혜 등과 달리 인사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고, 업무를 개시하면 경제부총리 김동연과 보조를 맞출 것이다.

김동연과 대립한다는 장하성은 결코 친노동 개혁파가 아니다. 이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김동연과 장하성이 보수 대 진보 대결을 벌인다는 프레임은 웃기는 허수아비 놀음이다. 처음부터 우파에게 유리하다.

물론 부차적으로 여권의 분열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

령 친문 핵심 그룹이라던 전해철(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후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냄)이 보수적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등과 손잡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찍어내려 한 것이 그런 효과를 줬을 것이다.

특히 적폐 청산 등을 내세워 지지를 받는 정부에서 대통령 측근 실세가 상대적 개혁 인사들을 몰아내는 모양새는 우파에게 자신감을 회복할 기회를 줬을 것이다.

장차 여권 내분을 사전에 막고 김경수 등 친문 후계 구도 구축을 위한 것이었을 텐데, 효과는 거꾸로 나타난 셈이다.

우파 사기 재장전

문재인이 우선회하자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래서 좌측 깜빡이 켜는 시늉을 하는 것은 촛불 염원과 우파 통치 9년 적폐 사이에 문재인 정부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한때 그토록 높았던 지지율은 개혁 염원 때문이지 문재인 ‘혁신

성장’ 따위를 지지해서가 아니었다.

촛불 운동은 전혀 혁명적이지는 않았어도 꽤 급진적인 개혁을 바랐다. 어쨌거나 정권 교체는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개혁주의의 헤게모니 탓에 정부의 개혁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개혁 조처들이 순전히 현 여권 덕분이라거나 자신들의 무임승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의 우선회가 왼쪽으로의 이탈을 낳은 것이다. 몇몇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 이탈층의 다수가 20대 진보적 청년층이라고 한다. 또한 문재인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유일하게 정의당만 지지율이 올랐다. 늘어난 정의당 지지층 안에서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은 대폭 낮아졌다.

문재인의 민주당은 한국 지배계급의 제2선호 정당으로, 자신들이 전통적 여당보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오히려 더 잘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는 정당이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적폐 구조와 연결돼 있고, 대중이 바라는 적폐 청산을 전혀 일관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이 초기에 위세를 떨치며 구여권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간절한 개혁 염원이 투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우선회의 결과 지지율이 급속하게 떨어졌다. 이는 우파에게 사기 재장전의 계기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는 4월 남북정상회담 때는 만찬에 야당 대표들을 안 불렀다고 불평했

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동행 초대를 거절했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양보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추가 개악 의사를 숨기지 않는다. 또한 사법 농단이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법원은 대놓고 증거인멸 위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다.

노조 파괴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이상훈의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삼성은 이재용 구속 시점에서 약속했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약속을 최근에 뒤집었다.

〈중앙일보〉는 이런 주문을 했다. “불신을 씻으려면 정치적 경쟁자를 끌어안는 협치, 진영을 초월한 인재 등용, 현장의 외침을 듣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동굴을 뛰쳐나와야 한다.” 문재인이 “현장”의 사용자와 구 여권에게 불신을 샀으니, 양보와 후퇴로 해소하라는 것이다.

인전에서 개신교 우익이 성소수자 행사를 무산시킨 것, 난민 반대를 내세워 우익이 새로 결집하려는 시도 등도 눈여겨 보며 대응해야 한다.

물론 우파 야당들의 지지율이 즉시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 촛불 운동의 반우파 정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그래서 또한 문재인은 개혁 포장을 폐기하지 않고 있고, 몇몇 조처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회복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경제나 안보 상황이 불확실한 탓에 이런 아슬아슬한 상태가 오래가지는 못할 듯하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면 이 나라 공식정치를 지배하는 두 정당 모두 위기인 셈이다. 구미에서처럼 정치 불안정과 새로운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 기성 정당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말이다.

이런 때 진정한 진보, 즉 좌파는 반자본주의적·반제국주의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개별 투쟁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이 투쟁들을 (정치적으로) 포괄화하려 해야 한다. 우파들의 악선동에 맞서 난민 문제 등에서 노동계급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개혁주의적 운동 지도부들은 문재인 정부의 약화가 우파를 되살릴까 봐 문재인 비판에 더 주저하는 듯하다.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는 단연코 노동개악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해 현장 조합원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문재인의 우선회가 우파 사기를 회복시켜 주는데도 노동운동이 문재인 비판을 삼가면 우파는 더 신이 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을 두들겨서 그 왼쪽까지 침묵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계와 노동운동이 문재인에게 인내심 많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는 길이다. 노무현 정부 후반부(대략 2005년 이후)의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포용국가론의 핵심은 자본주의 경쟁력 강화다

사진: 조영미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 가능한가?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경제 위기 시에는 변변찮은 개혁도 얻기가 쉽지 않고, 조건을 지키려 해도 큰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얼핏 보면 한국은 극우파가 부상하는 서구 나라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개혁 가능성이 열린 듯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만만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향우도 경제 위기 악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봐도, 문재인 정부가 ‘돈 안 드는 개혁’을 추진한 탓에 노동자들의 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불거졌다. 조선업과 한국GM, 금호타이어 등의 구조조정 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는커녕 일자리 학살에 앞장섰음을 보여 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아예 노골적으로 내던져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조합 고위 상근간부층을 사회적 대화에 끌어들이려 포섭하려 애쓰고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괜찮은 노동자들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이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노사정위의 후신) 위원장은 이 점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조직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노조 있는 곳의 노동자는 임금이 한껏 올랐다. 그때부터는 굳이 투쟁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뷰 진행자가 “그러면 경사노위는 싸움을 말리는 곳입니까?” 하고 묻자 문 위원장은 “그렇죠” 하고 답했다.(YTN 생생인터뷰 2018년 8월 28일)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실현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노동조합 운동은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섰고, 새로운 노동자 부문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런 투쟁들은 주로 항의 형태로 전개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파업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투쟁들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가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누더기가 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는 개악이 추진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졌지만, 이런 불만이 실질적 개혁을 얻어 낼 만한 수위의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

수동성

6월 30일 7만 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치른 후, 민주노총 지도부의 관심은 빠르게 대화 복원으로 옮겨졌다. 7월 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통령 면담에서 시작된 이런 행보는 8월 16일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복귀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런 지향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하반



왜 모았지? 6월 30일 문재인인의 배신에 실망한 노동자 8만 명이 모였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해 조합원들을 실망시켰다

기 계획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데서도 잘 드러났다. “[민주노총이] 대중 투쟁을 확장해 왔고 대중 투쟁력을 높여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도화된 초기업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즉자적 대응 투쟁, 반대와 저지 투쟁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 ‘반대와 저지에 급급한 투쟁’이라는 문구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대화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때 항상 꺼내 드는 표현이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화 일변도가 아니라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하반기 총파업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투쟁을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와 그 본질을 폭로하고 그에 맞서 일관되게 싸우자고 독려해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정부와의 신뢰 회복을 전제로 대화를 추진하면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민주노총 중심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복귀를 결정하고 나서 지난 3주 동안 각종 대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의 면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실무협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 회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의 간담회, 정부 부처들과의 노정협의, 민주당 당대표와의 간담회 등등이 그것이다.

이런 각종 대화는 민주노총이 최소한의 신뢰 회복 조치로서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던 것들이 거둬 무시되고 우향우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중단없이 추진됐다. 쌍용차나 전교조 법

외노조 같은 현안 외면, 규제완화법 추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이정미 의원 배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노동부 차관 이재갑을 신임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등이 그런 사례다.

이처럼 노조 지도부가 대화 추진에 주력하며 부산한 분위기를 (언론 등을 통해) 지켜보는 보통의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자들의 총파업 계획을 현실감 있게 느끼기가 어려울 것이다. 누군가 협상장에서 노동자들을 대리한다는 생각이 만연하면 수동성이 강화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다.

싸움을 말리는 게 임무인 문성현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자신이 “싸움을 제일 잘 말할” 것으로 기대돼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씨는 금속연맹 위원장이자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냈다.

이 밖에도 최근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그런 인물들이다. 이용선 씨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이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출신이고, 강문대 씨는 민변 노동위원장이자 단병호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이들의 구실은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다. 친문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노동운동의 저항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남탓 타령을 해 왔다.

이들이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로 복귀시키는 데 열을 올리는 당면 이유는 지지율이 50퍼센트대로 떨어진 문재인 정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지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것이 특히 문제인 이유다.

이들이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로 복귀시키는 데 열을 올리는 좀 더 장기적인 이유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 내는 것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 갈등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며 공공연히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를 강조한다. 그는 “상생기금 1퍼센트 가 지고는 어렵도 없다”면서 “임금 스펙트럼 가운데 중간 어디쯤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또, 문성현 위원장은 최근 “성동조선해양 상생 협약”을 중재하면서 이를 구조조정의 모범인 것처럼 제시했다. 이것은 정리해고를 철회시킨 협약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자들은 무려 28개월간 무급휴직을 하고 M&A(인수·합병)와 경영정상화에 협력한다는 거의 백지 위임에 가까운 희생을 강요당했다.

이런 사례들은 경사노위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그것은

한편으로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노사 협조(계급 협조)이다. 문성현 씨 표현을 빌리면, “노동자이지만 사용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노사 공동 운명체 정신”이다.

경사노위의 과제는 다른 한편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라는 이름으로 노동계급 내부를 이간질하는 것이다. 가령 손영우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이 기존의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시장의 외부자 간의 갈등으로 개혁이 가로막 [혔다]”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주장한다(《노동사회》 202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누더기가 된 근본 원인은 돈을 들이지 않으려는 정부 정책 때문이었다.

연대

요컨대 사회적 대화의 위와 같은 성격 때문에 대화와 함께 투쟁을 강력하게 병행하기가 어렵다.

한편, 민주노총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민생 문제에서는 후퇴하고 우경화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평화체제 로드맵과 반민주-분단 적폐청산은 “노동진영의 개혁과제와 공존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드 문제 하나만 봐도 잘 드러나듯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제국주의 문제에서 결코 일관된 진보 입장이 못 된다.

또, 지배자들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심화 노력이라는 조건에서 민주주의적 요구에 우선순위를 놓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노동자 계급의 고유한 과제·요구들과 함께, 여성과 성소수자 차별 반대, 난민과 이주자 방어, 반제국주의 문제들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노동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치 투쟁을 해야 한다.

만약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면 심중팔구 문재인 정부에 맞서 일관되게 투쟁하기 어렵다. 최근 민주노총은 남북 정상회담(9월 18~20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예정된 집회 일정 등을 취소했는데, 이 사례는 그런 문제점을 얼핏 보여 준다.

글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변변찮은 개혁도 얻기가 쉽지 않고 조건을 지키려 해도 큰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하반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대개 그렇다. ILO 핵심협약 비준도 선언에 그치지 못하게 하려면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의 좌파 활동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 정책의 문제점, 사회적 대화의 효과와 그 합의 내용의 문제점,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자 이간질을 폭로하고 그에 맞설 수 있도록 노동자 계급정치를 바탕으로 연대가 확대되도록 애써야 한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10년

체제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날

10년 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거대한 경제 공황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다. 기업주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한다.

토머스 텅글라-에반스

10년 전인 2008년 9월 세계 금융권 전체가 거의 무너질 뻔했다. 자본주의가 모두의 삶을 개선해 준다는 정치인들의 주문(呪文)은 산산이 부서졌다.

2008년 9월 15일 당시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우파 전문가들은 이 파산 신청을 두고, 자본주의 체제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경영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경영하는 정치인·은행가·기업주들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고작 몇 주 지나지 않아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이렇게 예측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몰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돼 각국 정부는 이 위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구제하려 온갖 수단을 쓰기 시작했다.

리먼브러더스 경영진은 “공격적 회계”를 이용해 자기 회사의 부채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감추려 한 사기꾼들이었다. 그러나 리먼브러더스가 몰락한 것은 탐욕스럽고 근시안적인 경영진 때문만이 아니었다.

2008년 5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의 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이렇게 선언했다. “금융 위기의 최악의 국면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다.” 그린스펀은 1980년대부터 자유시장 ‘개혁’을 앞장서 대변한 자였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후 그린스펀은 자신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결함을 발견”해 “매우 괴로웠다”고 말했다.

도박판

리먼브러더스는 빚으로 도박판을 벌인 덕에 찾아온 금융 호황의 한복판에서 성장했다.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지면서 문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국제 자금 시장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서는, 노동계급·빈민·흑인 등 상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상품을 판매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준 은행

들은 이 채권을 그냥 두지를 않았다. “자산유동화”라는 방법을 써서 그 채권들 수천 개를 하나로 묶었다.

그렇게 묶인 채권들은 “부채담보부증권”이니 “모기지담보부증권”이니 하는 그럴듯한 이름을 단 금융 상품으로 둔갑했다. 은행들은 이런 복잡한 상품들을 투자자들에 팔아 단기적 수익을 내, 좀더 장기적인 대출 상품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했다.

대출 상품을 팔아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은행들에게 수지 맞는 사업이었다. 이 때문에 2007년 신용 위기가 시작될 때에는 채권 시장은 약 8조 달러[한화로 약 1경 원] 규모로 부풀어 있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문제는, 이제는 꺼지기 시작한 훨씬 더 큰 금융 거품의 문제를 보여 주는 징후였다.

신용 덕분에 자본주의는 겉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 높은 신용 의존도는 위기의 타격을 더 크게 만든다.

금융시장 덕에 자본가들은 장기적 투자에 필요한 돈을 자신의 이윤보다 더 많이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미래의 수익으로 지불을 약속하는 채권(등치 큰 차용증)을 발행해서 말이다.

리먼브러더스는 세계적 금융 [시장이라는] 도박판의 중개인이었다. 리먼브러더스는 채권 시장에서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이 사고파는 수십만 개의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교환소 노릇을 했다.

다른 은행들은 특정 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이고 위험부담이 얼마나 큰지 등을 리먼브러더스에 의존해 판단했다. 그런데 그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지자, 금융권 전체가 주저앉기 시작했다. 이제 어느 은행이 문제에 휘말려 구제가 필요하게 될지를 투자자들이 알 수 없게 됐다.

(재정 상태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하다는) 스코틀랜드왕립은행도 파산 직전 상황으로 내몰렸다.

2007년 신용 위기가 일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혁명가 카를 마르크스는 금융 거품이 어떻게 커지고 꺼지는지 설명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언제나 호황과 불황을 번갈아 겪는다고 설명했다.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자본의 일부가 파괴되면서 금융 기관들도 함께 무너진다.

각국 정부는 자유시장이 기적을 발휘해 마법처럼 이 과정을 멈추고 금융 기관들의 일부를 구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정부와 [토니 블레어가 이끌던 영국] 신노동당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유화를 단행하고 막대한 구제금융을 은행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

각국 중앙은행은 (대출의 대가인)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는, 양적완화라는 이름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양적완화는 경제에 더 많은 신용을 집어넣는 정책인데,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은행들을 통해 경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런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해법일 뿐이었다.

금융 부문의 이윤은 생산 자본[의 이윤]에 기반해 있다. 자본주의의 성장은 실물 경제의 상태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다. [2007년] 금융위기 전에 실물 경제는 장기적 이윤을 위기를 겪고 있었다.

실물 경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금융 시장에 돈을 투자했다.

단기적으로, 그 덕분에 은행가들과 일부 자본가들이 수익을 냈다. 그러나 실물 경제 가치와 금융 부문의 팽창 사이의 간극 때문에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될 것이었다.

오늘날 세계경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08년 이후 미국 다우존스 주가 지수는 약 350퍼센트 상승했지만, 실물 경제의 성장치는 15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신용 경색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 덕분에 저리신용차입 시장이 호황을 맞이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당시] 영국의 예금은행이자 신탁회사인 바클레이은행은 리먼브러더스의 수익성 좋은 부문들을 사들여 버rier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붕괴는 이윤 극대화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비이성적인지를 보여 준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참상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사적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 충족에 기반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했다

은행가들은 보너스를 수백만 달러씩 받으면서 ‘해고’된 반면, 수많은 노동계급은 삶이 파괴됐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이 하락했다. 그리스처럼 수십 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곳도 있다. 복지 삭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기대수명보다 빨리 사망했다.

조지 W 부시 정부는 리먼브러더스를 구제할 수 없었다. 리먼브러더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다가는 연준 자체가 파산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구의 각국 정부는 이미 2007년 가을 신용 경색이 닥쳤을 시점에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상태였다.

영국 정부는 약 6500억 파운드 [한화로 약 730조 원]를, 미국은 약 9000억 달러[한화로 약 1000조 원]를 쏟아부었다.

이런 대규모 구제금융 자금을 마련하고 수익성을 회복시키려고, 정치인들과 기업주들은 긴축 정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급은 지금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더욱 늘어난 세계 부채

은행들은 사상 어느 때보다 거대해졌고, 여전히 통제가 안 된다.

정치인과 은행가들은 위기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기술만 늘었을 뿐이다.

정치인과 은행가들은 체제를 개혁하거나 하다못해 체제의 근본 요소들에 의문을 품기는커녕, 그저 체제를 복구하려 해 왔을 뿐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위기를 불러올 요인들을 키웠다.

그중 하나는 부채 규모를 키운 것이다.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는 더 힘들어졌지만, 기업 부채는 더 늘었다.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전반적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 전 세계 부채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17퍼센트였는데, 이는 2007년보다 40퍼센트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대마불사”인 대형 은행들을 쪼개고 금융 시장의 많은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는 담론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5대 은행이 전체 금융 자산의 47퍼센트를 통제한다. 2007년의 수치인 44퍼센트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투기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 등 금융 자산을 사들이는) 투자 회사들 중 상위 1퍼센트가 전체 금융 자산의 45퍼센트

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하나라도 파산한다면 2007년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논설위원 질리언 테트는 10년 전 위기에 대해 이렇게 썼다. “불투명한 투자 기구들의 숨겨진 거대 생태계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자, 투자자들은 ‘그림자 금융’의 세계를 알게 됐다. 규제 당국은 단속을 약속했다.

“그런데 ‘그림자 금융’이 줄어들었는가? 그렇지 않다.

“전통적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부문은 이제 45조 달러[한화로 약 5경 원] 규모이다. 2010년 28조 달러[한화로 약 3경 원] 규모보다 늘어난 것이다. ‘그림자 금융’은 전 세계 금융 자산의 13퍼센트를 통제하고 있다.

“은행 규제는 ‘그림자 금융’을 더 활성화시키는 효과만 냈을 뿐이다.”

초저금리의 유지, 은행과 다국적기업에 쏟아부은 돈은 체제를 구출했다.

그러나 다음 번 위기 때는 그럴 만한 재원이 없을 것이다.

금리가 0퍼센트에 근접한 상황에서 금리를 더 인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한 번 더 부자들을 구제하자고 나서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21호 / 번역 김준호

맑시즘2018 호평받은 강연

《공산당 선언》의 주제들은 무엇이고,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나?

최일봉

올해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해이고, 《공산당 선언》 출판 170주년 해입니다. 《공산당 선언》은 서구 역사에서 언제나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두 번째 베스트셀러입니다.

《공산당 선언》이 마르크스 사상을 배우기 위한 최상의 입문서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 불만 있고 반자본주의 사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선언》(이하 《선언》)의 저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공저자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르크스가 다 썼습니다. 마르크스가 출판 제작 마감일에 압박해 원고를 제출했기 때문에, 엥겔스가 공저자 구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엥겔스가 아무 기여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엥겔스는 《선언》에 포함된 내용과 용어를 놓고 마르크스와 자주 토론을 했고, 마르크스는 엥겔스의 소책자 《공산주의의 원리》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배경

《선언》이 출판되던 바로 그때 파리에 서 막 혁명(2월혁명)이 시작돼, 며칠도 채 안 돼 오를레앙 왕조가 무너지고, 프랑스 제2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혁명은 독일로 번졌고, 마르크스·엥겔스와 동료 공산주의자동맹 회원들은 독일로 향했습니다.

마르크스 등은 독일 자본가들이 봉건제를 전복하고 곧이어 독일 노동계급이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시나리오를 “연속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독일 자본가들은 기성 봉건제의 억압보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혁명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혁명은 이듬해인 1849년 패배로 끝났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혁명은 패배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영국으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소책자인가?

이 소책자의 제목에 ‘선언’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첫눈에 알 수 있는 점은 이 책이 강령을 설명한 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공산당’은 누구였을까요? 공산당이라 함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18년 레닌이 제안해 볼셰비키당이 당명을 바꿨을 때, 바뀐 당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시대에 ‘당’이라는 말은 현대적인 ‘정당’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 측” 또는 “... 조류” 정도를 뜻하는 느슨한 표현이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당 선언》의 ‘공산당’은 막연히 노동운동의 혁명적 조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말도 당시에는 오늘날과 매우 다른 것을 뜻했습니다. 당시에 사회주의는 **사회 개혁 운동**을 뜻했습니다(예컨대 《선언》 후반부에 언급되는 ‘봉건적/반동적 사회주의’, ‘부르주아적/보수적 사회주의’, ‘공상적/비판적 사회주의’ 등).

당시에 사회주의는 점잖고 명망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는 자신이 계급 적대를 초월해 있다고 믿는다고 마르크스는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공상적 사회주의자에게 노동계급은 가장 고통받는 계급이라는 관점에서만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들(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조건 심지어 가장 형편이 좋은 사람들의 조건까지도 개선하기를 원한다. 이 도 안에 계급의 구별도 없이 습관적으로 사회 전체, 특히 되도록 지배계급에 호소하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운동을 비롯한 매우 온건한 사회운동은 마르크스 당시의 공상적 사회주의와 매우 달랐습니다.

세월이 지나 19세기 후반 무렵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반대 그리고 모종의 사회적 소유권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기꺼이 자신들을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사회민주주의’라는 말도 사회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됐는데,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를 사회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국가 개입에 의해 일정 기간은 개선될 수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 점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넷째,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자본주의의 일부 문제들이 국가 개입으로 개선되더라도 자본주의의 기본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는 무한정 늦출 수 없고 조만간 재발됩니다. 사회의 위기와 기후 변화도 완화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고전이다

‘자본주의가 많이 변했으므로 《공산당 선언》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변형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주장입니다. ‘노동계급이 내부적으로 이질적이고 매우 다른 것을 뜻합니다.’ ‘노동계급이라는 건 없다. 다양한 계층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제 적어도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노동계급은 생활수준이 높아져 혁명에 아무 관심도 없다.’ ‘사회 양극화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등 자본주의의 폐해를 개혁할 수 있다’ 등등.

이런 주장들을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쓴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책갈피, 2017)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는 다섯 가지 점을 간단히 언급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이 올라가게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다른 곳에 서도) 없습니다.

둘째, 마르크스가 지정한 사회 양극

화 추세는 오늘날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돼 있습니다. “사회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라는 직접 대립하는 두 계급으로, 양대 적대 진영으로 점점 더 분열하고 있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계급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자본주의의 문제들 중 일부는 국가 개입에 의해 일정 기간은 개선될 수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 점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넷째,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자본주의의 일부 문제들이 국가 개입으로 개선되더라도 자본주의의 기본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는 무한정 늦출 수 없고 조만간 재발됩니다. 사회의 위기와 기후 변화도 완화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마르크스가 《선언》 초반부에서 인류 역사(문자로 기록된)의 상시적 특징이라고 선언한 계급투쟁도 거듭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자 연대》 신문 과월호 기사들의 제목만 훑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이 때로는 공공연해지고 때로는 은폐된다고 했습니다. 계급투쟁이 덮여야 감춰지거나 가려져 숨겨지는 시기는 일부 사람들에게 계급투쟁이 마치 과거사자가 돼 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 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선언》의 서두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에 관해 적들이나 경쟁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나 그들이 해대는 비난을 반박하고 공산주의의 진정한 사상과 목적을 밝힙니다. 그에 따르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1절은 계급과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해 부르주아지, 즉 자본가 계급의 등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르주아지는 봉건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는 것으로부터 등장했는데, 당시에 부르주아지는 봉건제 타파라는 역사적 임무의 중심 구실을 할 국민국가를 세우고, 농업의 지주 제도를 철폐하며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로 변형했습니다. 그러나 1976년 마오쩌둥 사후, 특히 1980년 이후 중국은 시장경제를 대거 도입하는(여전히 국가 주도였지만) 자본 축적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계급이 혁명적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새 계급사회를 만들 이해관계도,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승리해서 계급 착취를 끝내는 게 프롤레타리아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승리해

서 계급 착취를 끝내려면 어떻게 할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의 1872년 독일어판에 부친 서문에서 바로 전해에 일어난 파리 코뮌의 교훈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급은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를 그대로 인수해 사용할 수 없고 기존 국가를 강제로 해체시켜야 한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계급투쟁의 결정적 중요성

이 주제와 관련해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을 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사회의 역사는 모두 계급투쟁의 역사다. ...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부단히 대립했으며,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 왔다. 이 투쟁은 항상 전체 사회의 혁명적인 개조로 끝나거나 서로 싸우는 계급들의 공멸로 귀결되었다.”

마르크스의 말은 크게 두 가지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급투쟁의 결과에 따라 사회가 다르게 전개됐다. 제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과 조선과 중국의 운명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 사이에 이렇게 서로 갈렸

습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868년 사무라이(武士)들이 천황의 권위를 업고 쇼군(將軍)을 타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의 조건들을 창출하는 개혁들을 단행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또한 외세의 압박에 맞서고자 군사적 공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제국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올라섰습니다. 트로츠키는 이러한 일본의 자본주의적 개혁을 두고 “적을 가정보사로 만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선: 1894년 갑오민권전쟁이 패배함에 따라 광무 개혁(光武改革 1897~1905)이 실행됐습니다. 광무개혁은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 실패와 위로부터의 개혁 실패가 결합돼 조선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국: 반식민지화 상태에서 1949년 민족해방 혁명이 성공합니다. 마오쩌둥과 급진적 중간계급 지식인들이 (농민의 광범한 지지를 업고) 이른 이 혁명은 제국주의를 해외로 축출하고, 자본 축적의 중심 구실을 할 국민국가를 세우고, 농업의 지주 제도를 철폐하며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로 변형했습니다.

그러나 1976년 마오쩌둥 사후, 특히 1980년 이후 중국은 시장경제를 대거 도입하는(여전히 국가 주도였지만) 자본 축적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세르쥬(아나키스트 출신 볼셰비크)는 1930년대 후반을 “세기의 한밤중”이라고 묘사했습니다.(이 말은 그의 1939년작 소설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계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



혁명적인 개조로 끝나거나 서로 싸우는 계급들의 공멸로 귀결되었다.” 여기서 보듯, 마르크스는 결정론자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결정론자라거나,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의 필연적 도래를 말했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결정론은 인간의 결정 및 행동과 관계없이 역사적인 힘들의 결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생각입니다. 선택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선언》의 제1장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냅니다. “부르주아지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둘 다 불가피하다.” 마르크스가 간혹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훨씬 우세한 측면으로서 마르크스는 결정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서로 싸우는 계급들의 공멸” 운운을 보면 그가 결정론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계급들의 공멸”의 고전적 사례로는 4세기 이후 로마제국의 쇠퇴를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오늘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공멸했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인류는 일찍이 1930년대에 그런 일을 힐끗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1918~1923년 독일 혁명이 패배하고 1929년 세계경제 공황이 엄습하자 히틀러의 나치당이 급성장했습니다. 1933년 급기야 히틀러는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노동조합 등 모든 노동자 조직들이 분쇄당했습니다.

다른 한편, 1920년대 말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부상해 노동자 권력의 모든 재재를 한꺼번에 싹 제거해 버렸습니다.

1934년부터 1936년까지 노동자 투쟁이 다시 일어났지만(프랑스와 스페인 등지에서), 1937년 여름쯤에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세르쥬(아나키스트 출신 볼셰비크)는 1930년대 후반을 “세기의 한밤중”이라고 묘사했습니다.(이 말은 그의 1939년작 소설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계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

르크(1871~1919)는 인류의 미래가 “사회주의나 아만이나” 하는 갈림길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1930년대 후반 같은 상황이 ‘아만’이고, 이는 바로 서로 싸우는 계급들의 공멸로 빚어지는 상황입니다.(1930년대 후반의 아만적인 힘들의 결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생각입니다. 선택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그런데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는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현대 국가의 권력은 부르주아지 전체의 공통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위원회일 뿐이다.”

요즘은, 국가가 사회를 초월해 있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인용한 마르크스의 말은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도구이며 무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르크스 말대로 자본주의 국가가는 전체 자본을 위한 다른 기능들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입니다. 통화 관리, 거래 활동 감독하기, 노동력 공급 보장하기(복지국가, 근로기준법), 국내 시장 어느 정도 보호하기(트럼프), 갑작스런 기업 파산이나 은행 파산 사태에 직면해 중앙은행을 통해 개입하기(한국GM), 군사력 독점을 통해 제국주의나 친제국주의적 경쟁을 하기(한반도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자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한 마르크스 말은 세 가지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첫째, 야경국가론 법세를 풍깁니다. 야경(야간 경비원) 국가론은 오늘날의 ‘작은 정부’론과 흡사한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론입니다. 국가는 평화를 지키고, 재산권을 집행하고, 약간의 세금을 거두는 것에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프레카리아트라는 별도의 계층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계급 자체의 삶이 불안정해진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은 더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어느 때보다 급속히 발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노동계급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이 불안정해진다.

마르크스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들은 가끔 승리를 거두지만 승

을 풍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가 계급이 하나로 응집돼 **통로로 행동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마르크스가 다른 저작들에서 설명하듯이, 자본주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분열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데엔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분열은 자본가들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분열, 즉 자본간 경쟁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 전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셋째, 경제와 정치의 위기가 매우 심각하면 일시적으로 국가는 자본의 ‘일반 의지와 긴장을 빚을 수 있는데, 마르크스의 말은 이런 일시적 상황을 상징하지 않습니다(가령 트럼프의 등장과 그의 외견상 독물장군식 행동).

물론 자본주의 국가는 일상적으로는 마르크스 말대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을 기존 방식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이 패배한 직후인 1852년에 등장한 루이 보나파르트의 군사독재 정권을 두고 ‘보나파르트 정체(政體)’라고 불렀는데, 그때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국가가 프랑스 자본주의를 위해 프랑스의 개별 자본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가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투쟁에 대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승리는 대개 일시적입니다. 자본가 계급도 반격을 하고 종종 필사적으로 반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직접적인 것들로만 보는 사람들은 시야가 근시안입니다. 노동자 투쟁의 진정한 성과는 조직과 의식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크스는 노동자 **정치 조직**과 정치 의식의 성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닌과 비교됩니다.

이는 인용된 마르크스 말이 그 전 해인 1847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해인 1847년,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친자본주의 경제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아나키스트의 시조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은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 발포한 것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억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는 **노동조합** 조직의 성장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공산당 선언》 초판

리는 일시적일 뿐이다. 노동자 투쟁의 참된 성과는 그 직접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확장해 나아가는 데 있다. ... 모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다. ...”(강조는 발제자의 것임)

노동자들은 가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투쟁에 대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승리는 대개 일시적입니다. 자본가 계급도 반격을 하고 종종 필사적으로 반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직접적인 것들로만 보는 사람들은 시야가 근시안입니다. 노동자 투쟁의 진정한 성과는 조직과 의식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크스는 노동자 **정치 조직**과 정치 의식의 성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닌과 비교됩니다.

이는 인용된 마르크스 말이 그 전 해인 1847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해인 1847년,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친자본주의 경제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아나키스트의 시조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은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 발포한 것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억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는 **노동조합** 조직의 성장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라는 마르크스 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컨대 지금 이 순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을 둘러싸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치투쟁인가요? 이 부분에서 영어판은 독일어판을 정확하게 옮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어 원본에서는 바로 앞 문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적인 투쟁인 계급투쟁.” 즉,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투쟁”은 국가적인 계급투쟁, 즉 계급 **대부분**이 참가하는 투쟁(가령 총파업)을 말합니다.

마르크스는 바로 한해 전에 쓴 프루동 비판서 《철학의 빈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급 대 계급의 투쟁은 정치투쟁이다.”

나중에, 가령 1881년경 엥겔스는 계급들 사이의 투쟁은 정치투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마르크스에게 정치투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계급 **대부분**이 참가하거나 참가하게 되기 쉬운 투쟁이 바로 정치투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좌파가 흔히 노동계급의 조건을 둘러싼 투쟁을 모두 경제투쟁으로 여기고, 공식 정치권에서 논란될 이슈를 둘러싼 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여기(며 후자를 중시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정치투쟁 개념을 오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정치투쟁을 위해 평소에 지난한 정치 운동을 건설합니다. 그런 전면적인 상황은 마치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메시아가 도래하듯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부분의) 투쟁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보편화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과 ‘보편화’ 과정은 결코 자동적이 아닙니다. 인간 행위주체, 즉 노동계급 자력해방을 추구하는 혁명가들이 제구실을 해야 합니다.

혁명가들은 부분(부분)적인 노동자 운동이 서로 연대하고 서로 연계되도록 해 주는 정치적 주장과 정치적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적 정치이고, 그게 성공해야 정치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김지태

대구가톨릭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가대분회)가 낮은 임금과 온갖 천대에 맞서 파업을 시작한 지 39일 만인 9월 1일, 병원 측과 잠정 합의를 했다. 노동자들은 9월 5~7일에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이 합의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투표율 81.9퍼센트, 찬성율 93.8퍼센트)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은 병원 설립 38년 만에 노조를 만들고 첫 파업에 들어가 승리를 거둔 것이다.

노동자들은 핵심적인 불만의 하나였던 시차근무를 폐지했다. 시차근무는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병원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평일 노동시간을 한두 시간씩 줄여 토요일에 그만큼 일을 시켰다. 그러고는 전체 노동시간이 늘지 않았으며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버르는 상황에서 이미 시행되던 시차근무를 폐지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과다.

주5일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병원 측은 2020년에 가서야 도입하겠다고 버텼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내년 3월로 앞당겼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사학연금 적용)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번 투쟁 결과 오래 전부터 노동조합이 있던 다른 대학병원들처럼 수당 지급을 약속받았다. 임신부 야간 노동 투입도 금지했다. 젊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성과들은 임금 인상의 효과도 낼 것이다. 예컨대 사측은 시차근무를 이용해 연장근무와 토요일 근무를 시키면서도 연장근무 수당을 떼먹을 수 있었다.

부족했던 인력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다. 이번 합의로 일반 병동에서 간호



노조 설립 반년 만에 큰 결실을 내민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사 1인당 환자수 10~12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당장 인력이 크게 늘지는 않을지라도 인력 기준이 마련된 것은 중요한 성과다. 이후 인력 충원을 요구할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원 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 법제화'를 요구해 왔다. 인력 문제는 전국 모든 병원 노동자들의 매우 중요한 염원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법파견 논란이 있던 노동자 70여명은 즉시 직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2년 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규직 업무의 비정규직화를 금지하기로 명문화해서 사측의 비정규직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임금도 10퍼센트가량 인상했다. 인상분의 일부는 연말 특별 상여금을 기본급화 한 것인데 이는 당장 올해에는 같은 액수로 반영되겠지만, 앞으로 임금이 조금 더 인상되는 효과를 낼 것이

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폭에 다소 아쉬움도 표했다. 애초 요구인 20퍼센트 인상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길어지면서 정부와 사용자들이 어떻게든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성과다. 병원 측은 악착같이 임금 양보를 최소화하려고 버텼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생길 파급 효과를 우려했을 것이다. 다른 가톨릭 대교구와 병원 사용자들도 대구가톨릭대병원의 파업 결과를 주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 파업

이렇게 악랄한 병원 측을 상대로 노동자들은 단호하게 투쟁했다. 병원 측은 파업 노동자들이 병원을 '악마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비

난하면서 한동안 교섭까지 거부할 정도로 강경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파업 39일 동안 이탈자가 거의 없었다.

첫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이토록 단호하고 용기 있게 싸운 것은 감동적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에 노조를 처음 결성했고 반년 만에 첫 파업에 나섰다. 반면 대구대교구는 오랜 역사 동안 그 보수성과 악랄함이 악명 높다. 이런 사측을 상대로 노동자들은 굽힘 없이 싸웠고, 결국 병원 측을 무릎 꿇게 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가톨릭이 처한 위기와 맞물려 성과를 낸 측면도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사용자인 가톨릭 대구대교구는 지난 몇 해 사이에 온갖 비리가 폭로돼 내부에 쇄신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복지 시설과 병원 등 사업체가 과연 가톨릭 정신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톨릭 안팎의 불신에 직면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병원의 '갑질'을 폭로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에 돌입하자 대구대교구 측은 큰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은 서울에 있는 교황청 대사관을 방문해 위로의 말도 받아 냈다.

자화자찬하고 싶지는 않지만, 〈노동자 연대〉같은 언론이 이 문제를 수차례 부각해서 다루면서 대구대교구를 비판하고 노동자들을 지지한 것도 압력이 됐을 것이다. 사회적 관심과 연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업 막바지에는 서울성모병원 조합원들이 수십만 원을 모금하고 응원 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대구대교구의 위기는 세계적 차원에서 가톨릭이 겪고 있는 위기 속에 놓여 있다. 가톨릭은 아동 성추행 폭로 등으로 10년 넘게 위기를 겪어 왔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정치가 우경화하

면서 바티칸 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사임 요구가 나오는 등 수백 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저항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매우 큰 아일랜드에서도 여성들이 투쟁해 낙태 합법화를 쟁취했다.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낙태권 반대 100만 서명을 받는 등 보수적 태도로 일관해 낙태죄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자신감

가톨릭의 위기와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는 가톨릭이 소유한 다른 병원 노동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톨릭의 위기 상황에서 병원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운다면 승리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동안 가톨릭 소유 병원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섰다가 악랄한 탄압에 직면해 좌절한 경험이 있었는데 말이다.

가톨릭이 소유한 병원들의 노동자들은 상대적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저항할 용기를 줄 것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승리하고 얼마 뒤 강동성심병원 노동자들도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타결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자신감과 조직을 크게 발전시켰다. 노동자들은 수십 일간의 뜨거웠던 파업을 통해 변했다.

“전에는 부당한 걸 당해도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생겼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서로를 위해 투쟁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이번 투쟁으로 얻은 자신감과 조직을 기초로 노동조건 개선을 포함한 여러 투쟁들에서 계속 전진하기를 바란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강동훈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 6000여 명(9월 12일 현재)이 참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공부문 정책을 우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 청원은 맞벌이가정에 도움이 되는 ‘초등 돌봄 확대’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가 2016년에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법을 대표 발의했던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청원은 기간제 교사·강사를 비

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을 “누구의 백으로 쉽게 들어와 적당히 편한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가 “피땀 흘려 정규직이라는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우파적 비난을 근거로 유은혜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시장과 국가 기구 내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경제 상황에 따라 실업자를 양산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서 만들어 낸 문제를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리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악한 점은 이 청원이 ‘허수

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은혜 후보자는 2016년에 교육공무직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우파의 반발에 굴복해 발의 20일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최근에도 청문회를 앞두고 ‘교육공무직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했다’며 지금은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고 있어 그 법안을 발의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고 있기는커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쪽정이기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과 ‘줬다 뺏은’ 최저임금 개악에 항의하며 계속 투쟁해 왔고, 올 하반기에도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규직화 논의 자체에서 배제되고, 노조 설립 신고까지 반려된 기간제 교사들도 투쟁을 지

속하고 있다.

따라서 유은혜 후보자는 말 잔치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다시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우파들이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유은혜 후보자의 개혁 후퇴에 자신감을 얻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더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다. 말뿐이었던 ‘소득 주도성장 정책’을 비난할 때 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한편, 이 우파적 청원에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에 반대하는 우파적 청원에 반대하는 것은 옳다. 그런데 이 청원은 이를 위해 유은혜 후보자 지

명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관련 노조들도 이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별로 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조례 제정 운동이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유은혜 후보자는 이미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포기했고,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에 함께할 뜻을 밝히고 있다. 노동운동이 개혁 후퇴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유은혜 후보자를 무비판적으로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이 훼손돼 힘이 약화될 수 있다.

교육 개혁을 시행하고,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쟁취하려면, 우파의 공세에 맞설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일당·월급에 모든 수당을 포함시키는

건설 현장 포괄임금제 폐기하라

장우성

9월 12일 전국의 건설노조 토목건설분과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인다. 8월 늦장마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이 외치는 것은 “건설 현장의 포괄임금제를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야간이나 휴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모든 수당이 일당이나 월급에 포함돼 있다며 ‘푹 치는’ 것이다. 근로계약 시 하루 일당에 연장·휴일·주휴·연차 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초과 수당이 이미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초과노동을 많이 시킬수록 이득이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돼 왔다.

대다수 건설 노동자들도 포괄임금제 때문에 주 1회 유급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한 달에 5일만 굶은 날씨로 일을 못해도 임금이 1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무급으로 쉬라면 그 마음이 어디 편하겠어요? 최소한 일요일만이라도 유급으로 맘 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 현장의 청년 노동자 80퍼센트가 일요일에는 주휴 수당을 받으며 쉬고 싶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의 염원을 번번이 외면해 왔다.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2006년 내놓은 시범사업 정책도 휴일 무급 휴무(주휴 수당 지급 없이 휴일 건설 현장 작업 중지)뿐이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일요일 휴무제’도 마찬가지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 발주 공사에 일요일 근무를 제한한다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 휴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포괄임금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휴일 있는 삶은 요원하다”고 노동자들이 말하는 이유이다.

하루라도 맘 편히 쉬고 싶다

건설 현장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2011년 고용노동부는 건설 노동자의 휴가권을 보장한다며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이 지침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건설 노동자에게 포괄임금 적용을 제한하기는 했다. 그러나 수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일용직 노동자 대부분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에게 주휴 수당,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더 확산되는 효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몇 차례나 밝혀 왔다. 대법원이 이미 2016년에 건설 일용 노동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점을 볼 때, 이는 즉각 시행됐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조차 폐기



포괄임금제는 건설현장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이다

하지 않고 있다.

2007~2016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5700여 명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설 노동자다. 이런 환경 속에서 휴식은 곧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주휴수당 보장은 저임금과 산업 재해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이자 당연한 권리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투쟁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였던 건설 현장에서 빼앗겨 온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다. 이는 또 장시간 노동에 고통 받는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점점 희미해져 가는 문재인 정부의 포괄임금제 폐기 약속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부터 포괄임금 규제를 약속했다. 정부가 2017년 7월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괄임금 규제가 포함됐다. 그 한 달 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6월, 8월로 관련 지침 발표 시기를 거듭 연기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주52시간 단속 유예,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 대한 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

조처들이 추진돼 왔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려 한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된다.

2016년 통계를 보면, 전체 사업장의 30.1퍼센트에서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방문교육 지도사 등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서조차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 추진 상황을 볼 때, 이전 약속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포괄임금제 폐기와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이 필요한 이유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장호중

정부가 10월 중 국민연금 개악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9월 안에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크게 삭감됐다. 자기 평균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것에서 40퍼센트로 삭감했다. 무려 3분의 1 깎았다. (그중 절반은 2008년 한 해에, 나머지 절반은 2009년부터 20년에 걸쳐 삭감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래서 2018년 현재 연금은 자기 평균 소득의 45퍼센트를 지급받고 2019년에는 그 수치가 44.5퍼센트로,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줄어든다.)

민주노총은 현재 45퍼센트를 받도록 돼 있는 연금을 더는 삭감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옳은 요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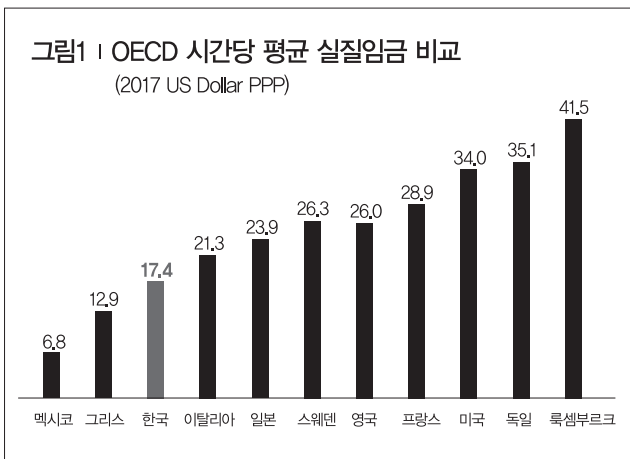
다만 이는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실제 노동자들의 평균 보험료 납부 기간(21년 인פק)을 고려하면 연금액 기준이 훨씬 상향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친민주당 언론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겠다며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진정한 쟁점은 어떻게 지급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즉 지급처럼 계속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할지, 아니면 기업주들의 부담을 더 늘릴지, 혹은 둘 다 늘려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마땅히 국가와 사용자 부담을 강화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이 점을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말고 노동자들의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늘리자는 주장에 문을 열어 주는 것으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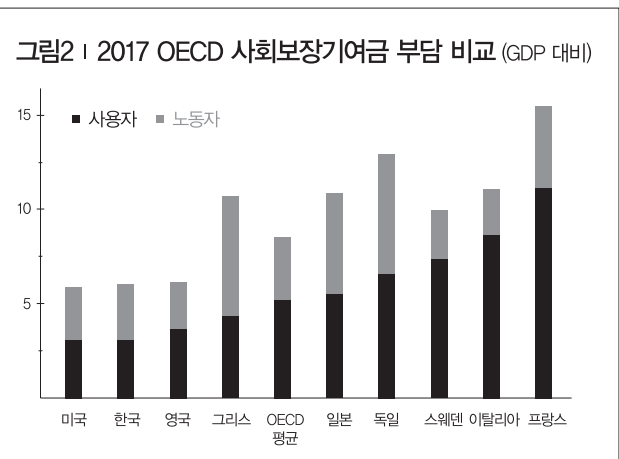
우르스럽게도 민주노총 내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이 점이 분명치 않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논리는 진보·좌파 진영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전제가 되는 기금고갈론은 노동자들의 부담(보험료)을 늘리는 효과적 인 이데올로기적 무기가 돼 왔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미래에는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견해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귀착되거나 국민연금 방어 투쟁에 대한 회의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처럼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인들을 부양할 생산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2008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은 그리스에서조차 연금 삭감은 정부의 우선 순위 문제였을 뿐이다. 즉 그리스 정부는 노동자·민중을 위해 생산과 분배를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 반대로 대중의 삶을 부정부적인 국제 시장의 압력에 내맡겼다.

게다가 한국 노동자들은 OECD 나라 중에서도 실질임금은 적고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부담은 높다. 반면 기업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매우 낮다(그림1, 2).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보험료를 20퍼센트나 인상해도 현상 유지만 가능할 뿐이고, 그조차 몇년 뒤에 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반면 그림 2에서 보듯 사용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지금

당장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면 당장 노인 빈곤율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증스럽게도 최악(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안)과 차악(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중에 고르라는 식으로 뻔한 의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정부의 의도에 끌려다닐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논의’가 결국 차악 선택을 강요당하는 수순이기 쉽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기업주들의 부담을 늘려 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널 보험료 인상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김종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간 아파트값은 11.9퍼센트 올랐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의 상승률 10.21퍼센트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KB국민은행 통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아무리 대출금을 보탠다고 해도 노동자·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서울 전셋값이 덩달아 오르는 조짐도 보인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한국의 20대 청년층 중에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30퍼센트를 넘는 ‘주거빈곤층’은 현재 47.1퍼센트나 된다. 게다가 서울시 임대주택 중 3분의 1은 주택법상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할 정도로 열악하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노동자·서민은 질도 떨어지는 섯방마저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왜 이렇게 집값이 빠르게 오른 것일까? 무엇보다 시중에 낮은 금리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7년 중 지난해 말에만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IMF가 발표한 글로벌 실질 주택 가격 지수는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 가격 거품이 10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등 시장에 돈을 푸는 조치를 취해 왔다.

이때 풀려나간 과잉 화폐는 각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세계적으로 투기를 부추겼다. 한국보다 투기가 심한 국가도 여럿 된다. 가장 과열이 심한 홍콩 등지의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도 현재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육박하는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생긴 일이다. 이 상황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집값이 얼마간 안정되기도 했다. 양도세 인상 조치의 일시적 효과와 미국 발 금리 인상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상당수 언론들은 ‘거래 절벽’이 왔다면 서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양도세 인상은 단기 처방 이상의 효과를 내기가 어려웠다. 어차피 세금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 안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투기 조장 정부

이럴 때일수록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보수 우파들은 투기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에 반하는 정책들을 힐난하기에 바쁘다. 투기 억



서울, 노동자 집안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봤고, 오히려 투기가 활성화됐다

제가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므로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방임해 투기꾼들의 손에 맡기면 어떻게 될지는 볼 보듯 뻔하다.

문재인 정부도 투기 억제에 실패했다. 심지어 투기를 활성화시키는 구실까지 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면서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줬다. 그런데 강남에서 투기꾼들이 집을 여러 채 사서 너도나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대자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이제 와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던 정책이 새로운 투기의 물꼬를 열어준 게 아닌가” 싶으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한다. 진보 진영은 일찍이 이를 예상해 비판해 왔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강북 등에 대한 개발 정책을 발표한 것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물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이후 박원순은 개발 ‘보류’를 선언했지만, 관련 계획을 전면 철회하지는 않아 해당 지역 집값은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처럼 자신들이 키워 놓은 불이 발등에 떨어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서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엔 제시된 집값 안정대책들은 과거 정책들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다. 잘해야 제자리걸음이고, 심중팔구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우선 LTV·DTI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문재인 집권 내내 거듭

되풀이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서 얼마나 효과적일지 미지수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미 간 금리 격차와 과도한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고려하다가도, 가계부채와 한국 경제의 침체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인상하지도 못하는 듯하다.

물론 정부는 부동산 과세 강화 방안들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그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양도세 강화안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듯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오른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참여정부 때도 종부세 3퍼센트 세율로 투기를 잡지는 못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경향신문>조차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몇 억 원씩 오르는데 세금 몇 백만 원 오른다고 팔겠나”고 되물을 정도다. 투기를 제대로 잡으려면 이보다 강력한 조세 부과가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

이해찬·장하성·김현미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입을 모아 내놓은 대안은 ‘공급 확대’였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파의 대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급 확대 정책은 오히려 전형적인 투기 조장 구실을 톡톡히 해 왔다. 건설업체들은 공공 택지를 사들인 후, 아파트를 짓고 값비싸게 분양해서 폭리를 취해 왔다. 그 결과 집값 안정은커녕 고분양가로 집값 상승만 일어났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도시들이 투

기꾼들의 놀이터가 됐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폭등은 바로 이런 공급 확대 정책의 실패이기도 했다. 당시 노무현은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그의 집권기 동안 부동산 투기는 이명박·박근혜 집권기보다 훨씬 활발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 놓고도 정치인과 관료들은 집값을 잡겠다는 미명하에 이런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노동자·서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열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적잖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불만 사항으로 꼽았다.(가장 큰 불만 요인인 ‘민생 문제’도 이와 밀접히 연관돼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했듯 지대 수익은 잉여가치의 또 다른 형태이다. 이는 애초에 노동계급에게 다시 돌아와 마땅한 소득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은 노동계급의 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또한 투기를 실제로 억누르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강화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세표준구간이 개편되고, 부동산을 97억 원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최고 세율 4퍼센트가 부과된다. 또한 이명박 정권 때 공시 가격의 80퍼센트 수준만 과세하도록 한 조항을 철회하도록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부세 대신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

자고 제안했다. 서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서울을 충분히 높게 책정한다면 꽤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퍼센트로 고정해 놔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완전히 공감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서민의 주거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파과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자산 소유자들의 이익을 침해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계급적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 준다.

Q. 용어설명

양적완화

제로 금리가 된 후에도 중앙은행이 국제나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을 매입해 금융시장에 돈을 주입하는 정책이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더욱 떨어져 기업들이 투자하기 쉬워진다.

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가 40퍼센트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LTV (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예를 들어, 주택의 담보평가 금액이 1억 원이고 LTV가 60퍼센트일 경우, 6천만 원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조세.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김승주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1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기력하다. 떠날 권리가 있다 해도, 떠난 뒤 어떤 국가로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동 등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열강들의 개입과 전쟁은 끊임없이 난민을 양산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난민 수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올해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난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외부 장벽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아등뿐 아니라 난민 가족 전체를 북아프리카에 억류시키는 난민 강제수용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에 대해 잔인한 가족 분리 정책을 밀어붙이려다 발에 부딪혀 철화한 직후에 그랬다.

각국 지배자들의 반이민 정책에 힘입어(또는 그것을 강화하며) 유럽에서는 파시스트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독일 쾰른에서 극우와 나치 5000여 명이 시위를 벌였고, 스웨덴민주당 등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우익들은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테러 등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 잠입한 ‘가짜 난민’이라는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운운하면서도 난민 신청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인종차별적 우익들의 거짓말을 방관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집트 등 난민이 많은 나라들을 대거 무사증 입국 국가에서 제외했다.

난민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도 ‘불법 체류자’로 몰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도 강화했다. 올해 1월 법무부는 특별 단속 지역, 합동 단속 기간, 단속 인원을 모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장을 이동할 자유조차 없다. 이런 경제적 조건과 차별 때문에 본국에 두고 온 가족들과는 사실상 생이별하게 된다.

국경이라는 장벽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피부색 다른 외국인들만이 아니다.

8월 20일부터 일주일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통 큰 만남’에 대한 이산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100명 안팎으로 제한된 상봉 규모는 그대로였다. 2000년대 이래 지금까지 13만 2000여 명이 상봉 신청을 했지만 실제 상봉을 한 사람은 3만여 명일 뿐이고 신청자 중 사망자만 8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런 제한적인 이산가족 상봉조차 끝끝내 엮두를 못 내고 숨죽이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탈북민들이다. 탈



‘요새화된 유럽(국경 순찰과 단속 강화) 정책 때문에 2015년 비극적으로 숨진 시리아 난민 아동 아이란 쿠르디

북민들 중에는 ‘할 수만 있다면 북한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남한에서 그들은 국정원의 감시 하에 놓여 있고, 밍보였다가 간첩으로 몰리기도 하기 때문에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이산가족과 탈북민은 제국주의 열강의 점령, 전쟁, 그 뒤로 이어진 남북간 체제 대결로 점철된 한반도 역사의 희생자들이다. 그러나 정작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국경에 별로 제약받지 않는다. 보통의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널 때,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만국의 노동자

지배자들은 국경을 넘어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지하고, 해외 관광 사업을 고무하고, 좀 더 ‘값싼’ 노동력을 이동시켜 이득을 볼 때에는 “세계화”를 찬양한다.

그러나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으려 하면 못 들어오게 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박해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역겨운 이데올로기들을 만들어 낸다.

지배자들은 국경 통제가 사라지면 갑자기 많은 이주민이 밀려 들어 국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빈곤, 실업, 주택난 같은 사회 문제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탈북민들도 남한 정부로부터 받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을 이유로 복지 재정을 깎아먹는다는 은근한 비난의 눈초리를 받는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그 국가의 생산에 참가할(따라서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 줄) 노동자도 없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사실 사람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경제 자체가 불황이고 지배자들이 인간의 필요보다 이윤을 우선시키기 때문

이다. 이처럼 국경 통제와 그에 뒤따르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계급 문제라는 진정한 쟁점을 숨기고 분노를 희생양에게 돌리는 효과를 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민 국가의 관점이 아닌 **국제주의**의 시각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가 ‘각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가 아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고 말했듯,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그것을 위한 교류의 관점에서 국경 통제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마르크스 자신이 당대 영국과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평범한 영국 노동자들은 아일랜드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경쟁자로 여겨 증오한다. 아일랜드 노동자들에 관한 한, 영국 노동자는 자신이 지배 민족의 일원이라고 느끼고 따라서 아일랜드에 대항해 자기 조국의 귀족과 자본가들의 도구가 되고, 그 결과 자신을 지배하는 귀족과 자본가들을 강화한다. ... 아일랜드인은 이 자까지 덧붙여서 보복을 한다. 그는 즉시 영국 노동자를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의 공범자이자 그것의 어리석은 도구로 보게 된다. ... 이러한 적대 관계야말로 영국 노동계급이 자신의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다. ... 그[자본가] 계급은 그 사실을 완전히 알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마르크스는 국경을 기준으로 노동계급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지배자들의 핵심 지배 전략이라는 점을 일찍이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자유왕래나 이주의 자유는 먼 미래에나 가능할, 또는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금 유럽과 한국에서 모든 이민 통제와 인종차별에 반

대하면서 난민 방어 운동을 건설하는 과제와 매우 밀접하다. 지금 배 위에서, 국경에서, 난민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는 난민들에게 이주의 자유는 더 나은 삶 이전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절박한 요구다.

한 나라 안에서조차 중요한 원칙이다. 특히 본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이간질에 반대하는 것(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건설 노동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 방어하기)은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단결된 투쟁을 건설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다. 앞서 다뤘듯, 경제 위기가 심화할수록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을 인종, 성별, 종교, 고용 형태, 나이 등으로 갈라치기하고

약화시키려 한다.

이윤 체제와 세계적 불평등, 제국주의의 난도질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주와 난민 (통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주의 자유와 자유왕래는 부유한 나라의 부자 시민들의 특권이 아닌 보편적 권리가 돼야 한다. 국경을 넘어선 교류 속에서 국제 노동계급에게는 공동의 경험의 축적되고 나아가 국제적 단결의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국제적 이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교류와 그를 통한 단결 도모를 한결같이 옹호하는 세력이 돼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난민은 받아들이고, 난민 혐오는 추방하자

이현주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표적 삼아 거짓말을 퍼트리고 이슬람 혐오를 부추긴다. 도심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다섯 차례나 열었다.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조경태 등은 난민법 폐지를 요구한다.

며칠 전 기독교 우익들은 인천 쿼터 페레이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웠다. 난민 반대 우익들도 9월 16일 난민 연대 집회가 열리는 장소 바로 옆에서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여차하면 난민 연대 집회와 행진을 휘방하겠다는 태세다.

최근 우익들이 기가 산 데는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크게 한몫했다. 우익들은 성소수자에 이어 소수자인 난민들을 공격하며 결집하고 세력을 회복하려 한다. 9월 16일 규모 있는 집회와 행진으로 난민들을 방어하고 우익들의 기를 꺾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우익들의 압력에 굴복해 난민법을 개악하겠다고 예고했다. 난민법이 개악돼 난민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면, 가뜩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난민들의 처지는 한층 더 악화할 것이다.

한국 거주 난민들의 위태로운 삶

난민들은 험난한 여정을 거친다. 간신히 탈출해도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한국에 도착한 많은 난민들은 지독한 차별과 냉대, 생활고를 견디며 살아간다.

난민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난민 심사다. 난민 심사 과정은 애초에 난민들을 걸러 내도록 설계돼 있다.

“담당 공무원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만 추궁하려는 것 같았다. 똑같은 질문을 1~2시간마다 반복해서 물어보는 바람에 한 마디라도 앞의 대답과 다를까 봐 조바심을 쳤다.”(《우리 곁의 난민》, 문경란, 2017 중에서 러시아 출신 난민이 한 말)

난민 특성상 개인의 진술이 난민 심사 때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데도, 통역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 “닥쳐라”, “너네 나라로 가라”는 등 모욕적 막말을 듣기도 일쑤다. 최근에는 난민 심사조서가 조작된 일이 폭로되기도 했다.

난민 심사 결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도 난민들을 피탈리게 한다.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자이드 씨는 2년 5개월가량을 기다리는 중이다.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이의신청에 행정소송까지 10년 넘게 기다리기도 한다.

배척적인

이런 배척적인 난민 심사 때문에 1994년 이래 난민 심사를 받은 2만 974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849명뿐이다(인정률 4퍼센트). OECD 평균 난민 인정률인 24.8퍼센트에 한참 못 미친다.

심지어 난민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에 온 10명 중 9명이 그런 신세다. 한국 정부는 인천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른다. 신청부터 뻑뻑한 것이다.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한 난민들은 송환대기실에 구금된다. 강제 송환도

벌어진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항공사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고, 나무 침대에서 매트리스와 침구 없이 잠을 자게 하고, 전등은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등, 2016)

강제 송환은 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천신만고 끝에 신청에 성공하더라도 첫 6개월 동안은 취업이 아예 금지된다. 난민들은 한 달에 20~40만 원의 ‘생계비’ 지원으로 버텨야 한다. 그나마도 모두 받는 건 아니다. 2017년에 지원을 받은 사람은 난민 신청인 중 3.2퍼센트뿐이었다. 지원금도 안 주면서 취업을 금지하니, 정부가 ‘불법 취업’을 부추기는 꼴이다.

6개월이 지나도 난민 신청인들이 발급받은 G1비자(임시 체류 비자)로는 단순 업무만 가능하다. 쓰레기 분류, 물건 포장, 재봉 등등. 아랍 출신 난민들은 하수구 청소나 폐차장, 중고차 청소·수리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한다. 돈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고된 일들이다.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여성 난민들은 어려움이 더 크다. 잠시라도 아이를 맡길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다.

히잡이 취업의 장애가 되기도 한다. 예멘 출신 여성 난민은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 직장에서 히잡을 못쓰게 한다 ... 일을 하고 싶으면 히잡을 벗으라고 하는 게 싫다. 손으로 일할 뿐인데 벗어야 할 이유는 없다.”

안타깝게도 난민들의 고통은 대물림된다.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 가정의 자녀들은(난민 인정을 받았을 때조차) 출생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교에 다니려면 학교장을 찾아가 사정사정해야 한다. 병



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희생자들이 비난받아야 하는가

원 진료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난민인권센터가 2010년 난민의 심리 상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3분의 1이 공포불안, 대인예민성, 강박증, 불안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선 환경과 불안정한 생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향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모욕과 멸시 등 이 모든 것들이 난민들을 고통에 빠뜨린다. 청와대 앞 농성에 동참하고 있는 여성 난민 신청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집트에 있는 게 두려웠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게 더 두렵다. 여기서 가족도 없고 혼자니까 내일이 두렵고, 모든 게 두렵다.”

최소한의 조건

요컨대, 난민 인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부는 2014년에 시리아 난민이 증가하자 그중 일부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했다. 예멘 난민 일부도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당연하다)와 취업활동을 할 권리만을 보장받을 뿐이다.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도 없다.

“인도적”이라는 미사여구와 달리, 이런 정부의 처사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수용 책임이 국제적으로 중대한 의제가 되어 있는 통에 차마 강제 송환은 못하지만 그들의 처우나 권리 보장 등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다.”(《우리 곁의 난민》, 문경란, 2017)

한편,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협약상 난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한다. 현재 전 세계 난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리아 난민이 정작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한계를 보여 준다.

난민 속죄양 삼기에 맞서야

이처럼 한국 정부는 배척적인 난민 제도를 유지하며 난민을 짐짝 취급해 왔다. 인도적 체류권을 보장할 때조차 그들의 실질적 생활 조건은 나몰라라식이었다. “국민 우선” 운운하며 난민들이 세금 값아 먹는 존재인 양 떠드는 인종 차별적 우익의 선동은 거짓말이다.

우익들은 “가짜 난민”이 판친다며 “가짜 난민 송환”을 요구한다. 본국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지 않는데도 돈 벌러 와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체제가 낳는 전쟁과 박해 등의 참상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들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우익의 거짓 선동에 대한 철저한 반박은 〈노동자 연대〉 251호 ‘예멘 난민 배척 논리를 반박한다’를 보시오.)

우익들은 “국민” 운운하지만, 그들과 연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에 앞장선 자들이다. 즉, 노동자를 공격하는 자들과 난민을 반

대하는 자들은 다르지 않다.

우익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난민 등 이주민을 속죄양 삼아 실업, 복지 축소와 같은 경제 위기 책임 전가에 대한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데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 이후 쫓고라들었던 우파 세력을 결집해 세력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있다. 노동자들이 난민 방어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더한층 쥐어짜려 하면서 이런 이간질에 굴복하고 있다.

지배자들이 자본주의 위기의 책임을 그 희생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난민 인정을 대폭 확대하고 난민에 대한 복지와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하며 난민들과 함께 싸우자.

※ 참고자료: 《우리 곁의 난민 — 한국의 난민 여성 이야기》, 문경란, 2017.

